참 고 **보도자료 요약본**

1. 보도 개요

○ 대제목 : 조선업 분야 국민·외국인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.

○ 소제목 : 법무부에서 조선업 비자 개선, 국민 고용 촉진, 광역형 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 개최

○ 배포일시 : 2026. 3. 11.(수) 14:00

○ 담당부서 :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(지역체류지원과, 체류관리과, 외국인정책과)

2. 주요 내용

□ 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**'26. 3. 11.(수) 울산에서 조선업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**하였음

○ 이번 간담회는 최근 울산에서 광역형 비자 등 조선업 외국인력 유입으로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 **관계부처, 지방정부, 조선업계, 노동계, 시민단체 등**이 함께 현장 의견을 나누기 위함임

1 조선업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방안 논의

○ 참석자들은 **조선업 내 외국인력의 유형(E-9, E-7-3, F-2, F-5 등)이 점차 다양**해지고 있으며, 조선업 외국인력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저임금 구조, 지역경제 기여와 소비활동 미흡,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등 문제를 지적하였고,

※ (조선업 외국인력 통계) ①전문인력(E-7-1) 약 400명, ②일반기능인력(E-7-3) 약 13,000명, ③비전문취업(E-9) 약 8,000명, ④그 외 거주(F-2) 및 영주(F-5) 등 약 4,800명임(붙임 1)

※ (울산지역 생산직 외국인력 추이) ①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(E-9) ('22) 4,725명 → ('25) 8,148명, ②일반기능인력(E-7-3) ('22) 252명 → ('25) 4,339명, ③숙련기능인력(E-7-4) ('22) 76명 → ('25) 762명

○ **'전문기술을 갖추고 장기체류하는 숙련인력 중심'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민생경제 기여도를 높일 필요성**이 있으며, 일반기능인력(E-7-3)의 **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임금 수준을 제도 완화 이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**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

○ 법무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**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기능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 제도를 개편**하고, **기업의 국민 고용 확대 노력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연계**하는 등 **제도를 정비**할 예정임

2 조선업계 국민 고용 촉진노력 확인 및 국민·외국인 상생방안 협력

○ 법무부가 '24. 10월 일반기능인력(E-7-3)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임금기준 완화할 당시 **기업들이 약속했던 국민 채용계획을 점검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상생방안을 논의**하였음

○ 최근 법무부 점검 결과, **조선업계는 국민 채용과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**을 기울였으나, 고위험·고강도 업무라는 조선업 특성 등으로 인해 **생산직 인력의 고용 유지는 미흡**한 것으로 나타났음

3 울산 광역형 비자의 현안 의견 청취 및 평가방향 논의

○ 울산 광역형 비자에 대해 참석자들은 일반기능인력(E-7-3), 비전문취업(E-9) 등 **조선업 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**고 의견을 제시하였음

○ 법무부는 현장 의견들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제도의 **평가 로드맵을 마련**하고, 신중한 검토·평가를 거쳐 **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**할 계획임

□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은 "오늘 참석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목소리를 가졌지만, **국민과 민생경제를 우선으로 생각**하고 **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힘이 되는 이민정책을 바라는 마음은 비슷**하다고 느꼈다"고 소회를 밝히며, "앞으로도 **지속적인 소통**을 통해 **조선업계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만들어내겠다**"고 강조하였음